

# 전국에 울려 퍼진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투쟁의 목소리

✎ 편집국 | ⓒ 승인 2013.05.06 11:46

## | [기고]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사업 총정리



▲ 두 노동자가 밧줄 하나만을 의지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건물 유리창 청소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 변백선 기자

작년 하반기부터 중대재해가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진행된 2013년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과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를 걸고 4월 한 달 동안 전국의 현장과 지역에서 조합원 교육과 현장 선전이 진행되었다. 여수지역 건설노조를 비롯하여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 부울경 지역 등 권역별로 중대재해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노동청 앞에서의 집회가 진행되었고,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적으로 사진전등 대 시민 선전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건설산업연맹의 근로복지공단 집회, 화섬연맹의 발암물질 노사 공동선언 투쟁 선포식, 금속노조의 철강산업 발암물질 토론회, 서비스 연맹의 감정노동 캠페인, 공공운수와 보건의료노조가 공동으로 진행한 ‘병원 여성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준) 발족 등 산별 단위의 사업도 전개되었다.

중앙에서는 산재사망 아주라 콘서트, 살인기업 선정식, 4.28 산재사망 시민추모 문화제등 연대단위와 공동으로 다양한 기획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4월24일에는 민주노총과 심상정,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의원 공동주최로 법 개정 방안 토론회가 열려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과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본격적인 출발선에 서 있게 되었다. 아울러, 한 달 동안 다양하게 진행된 4월 사업은 4월 26일 전경련 앞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결의대회로 집중되었다.

2013년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에서 일보 전진을 이루어 낸 것은 첫째, 안전보건의 주요한 요구였던 '기업 살인법 제정과 원청 책임강화'를 핵심요구로 현장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영역까지 중심 의제로 부각시키고, 대안적인 법 개정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둘째, 그 규모는 차이가 있으나 가장 많은 산별연맹과 지역본부가 참가하는 사업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공공운수와 보건의료노조의 공동사업으로 병원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후 여성 노동자 건강권 문제의 주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4.28 산재사망 시민 추모위 사업으로 천주교, 불교, 기독교등 종교계에서 진행한 산재사망 추모 행사는 산재사망 문제의 사회적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한달 내내 다양한 분야로 사업이 전개되었으나, 사업 준비 과정에 있어서는 어느 해 보다 어려운 시기였다. 민주노총의 전반적인 조직 불안정성과 현장단위 안전보건 투쟁의 수세적인 현실은 다양한 사업의 참여 규모나 열기가 고양되지 못하는 현실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4월 사업을 준비하고 집행한 전국의 노동안전보건 간부 및 단체 활동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4월26일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전경련 앞에 있던 바로 그날,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 5단체가 노동입법 관련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재계가 반대에 나선 입법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이 있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와 관련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하청 산재예방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부여한 법안이다. 그러나, 여야 6인 협의체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 결정되고, 환경노동위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 단계에서 막혀 버렸다.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반복인 화학물질 사고 예방 뿐 아니라, 사업주 처벌강화와 원청 책임강화라는 주요의제 법제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에 4월사업의 토대를 딛고 본격적인 대 자본, 대국회 투쟁에 나서야 한다.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



편집국 [kctuedit@nodong.org](mailto:kctuedit@nodong.org)